

광주·전남 도박 중독 환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총 384명...20-30대 연령층 73% 집중돼 외부 활동 줄어 10대 145% ↑...“치료 환경 구축 시급”

광주·전남지역 도박중독 질환 환자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10대 연령층 사이에서 도박중독이 급증,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광

주전남지역 도박중독 질환 환자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광주는 2016년 39명, 2017년 45명, 2018년 59명, 2019년 72명, 2020년 83명이며, 전남은 같은 기간 13명, 8명, 10명, 28명, 27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도박중독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1천661명으로 매일 4.6명이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셈이다.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6년부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앞선 기준, 서울이 452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06명(18%), 부산 190명(11%)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2016년도 대비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175%가 증가해 33명이며, 다음으로 인천이 170%가 증가해 154명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20년 기준 30대가 전체 환자 중 607명(37%)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20대가 603명(36%)로 많았다.

그리고 2016년도 대비 2020년도 가장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10대로 145%가 증가해 98명이었다. 즉, 도박중독 질환 환자 수가 20-30대에 집중돼 있고, 특히 10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도박중독은 알코올, 마약과 함께 3대 중독으로 꼽히고, 2015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이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수는 1만6천445건인데, 같은 해 도박중독 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람 수는 접수된 건수의 12%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20-30대의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도박중독자를 만들 우려가 큰 만큼, 도박중독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인식과 함께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0대의 경우 코로나로 실내 활동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사다리게임, 홀짝 등의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10대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10대의 도박중독은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공장 가로막은 화물연대 지난 2일 오후 광산구 호남사니 광주공장 앞에서 파riba게트 등 SPC그룹 가맹점에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있다. /연남뉴스

자동차매매 ‘유령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조소섭 “국토부 자격증 제도 관리 강화 필요”

최근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사원의 사원증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소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천622명에서 2021년 3만9천53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2016-2021년) 발급된 사원증은 한국자동차연합회 3만6천647개, 전국자동차연합회 3만2천222개 등

총 6만8천869개로 나타나 반납해야 할 사원증은 2만9천816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납된 사원증은 전국자동차연합회 4천642개(15.5%)에 그치고 있을 뿐 한국자동차연합회의 경우는 폐업·휴업 등 고용 중단에 따른 사원증 반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3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착용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용이 종료됐을 때에는 연합회에 사원증을 반납·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매매 사원증은 고유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발급기관, 업체명, 생년월일, 성명, 유효기간, 조합명까지 명시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사원증 반납·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중고차매매 피해건수는 2016년 350건에서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고, 자동차매매 종사원의 ‘유령 사원증’이 시중에서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조소섭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고가의 자산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종사원이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사원증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에 불 지른 시민 무죄

법원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반대 위한 정당행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옥된 시민이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유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3일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이 확정됐던 고(故) 최모(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다.

최씨는 1980년 5월18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동구 공동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군중 수백명이 “방송국에서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불 질러 없애 버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위할 당시 시위대로부터 휘발유 통을 받아 박모씨, 성명불상 1인과 함께 방송국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와 함께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불을 낸 것이 아니며 다른 혐의 역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최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 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계엄 해제 시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앞서 1998년 재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최씨의 행위 역시 헌법의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로 봐야 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광주 참전명예수당 미수급자 ‘전국 2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광주에만 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3천21명의 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요

건 등이 달라 새로운 주거지를 전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

명 순이었다.

반면 대구, 부산, 제주도는 참전명예수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자가 없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 99%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으로 정확한 인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목포해경, EEZ 제한조건 위반 中어선 나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제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1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4t·유망,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 출력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50마력을 37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 시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조업 척수가 늘고 있다”며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기든경합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